

## 5.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 정책과 한·미관계 전망

박 영 호

국제관계연구실 실장

미국 역사에서 큰 획이 그어졌다. 미국의 독립 이후 232년 만에 흑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부시 행정부에서 장관 직위로는 으뜸인 국무장관에 흑인 남성 파월과 흑인 여성 라이스가 연이어 4년씩을 역임하고, 마침내 미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직위를 흑인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링컨 대통령에 의한 노예해방 못지않게 미국의 흑인들은 환호할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후보의 당선은 미국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부시 대통령의 8년 집권 기간 동안 다른 어느 때보다 미국 사회가 이념, 세금, 규제, 무역, 교육, 보건, 사회보장, 이민, 이라크 전쟁 등 국내 및 외교안보문제로 양분됐다는 평가가 있으나, 미국만큼 다양한 이슈를 두고 다양한 정치행위자의 참여를 통해 대안을 찾아가는 민주적 정치과정을 가진 나라도 드물다. 오바마의 당선은 오래전 미국 사회를 특징짓는 용어로 사용된 melting pot의 21세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의 경제위기는 부시 대통령 집권 8년 동안 손상된 미국의 리더십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 오바마는 '변화'를 기치로 하면서 실추한 미국의 리더십 재건을 내세웠다. 리더십의 회복이야말로 국제질서 주도국으로서 미국이 도전해야 할 중요 과제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해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의제는 경제위기의 극복이다. 그러나 미국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미국이 세계의 주요 나라들과 손을 맞잡아야 한다. 외교안보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민주당은 외교정책에서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노선을 따른다. 또 문제해결 중심의 실용주의적 접근과 정책수단을 중시한다. 클린턴 행정부가 그랬고 부시에게 패배한 고어의 선거공약도 그랬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세계 리더십으로부터 더욱 교훈을 얻었다. 이념적 차이와는 무관하게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일방주의가 아닌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중요시 한다. 또 국제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유엔과 같은 국제제도를 중시하고 외교적·경제적 수단을 강조한다. 그렇다고 하여 미국의 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바마 당선자가 외교안보정책에서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한반도와 관련된 것은, 첫째, 핵확산방지조약의 강화이다. 구체적 행동 계획으로는 NPT를 강화하여 핵확산을 분쇄하며, 따라서 NPT 규범을 깬 북한, 이란 등은 자동적으로 강력한 국제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둘째, 테러집단의 수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모든 핵물질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핵무기 물질 생산을 금지시키기 위한 국제체제를 협상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었으나,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물질의 확보와도 무관하지 않다. 셋째, 모든 나라와의 직접 외교 추진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넷째,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이다. 한국과 미국은 공동의 적에 대응해야 하며, 공유 가치와 상호 이익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기반, 21세기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공동 비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

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담긴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종식 추구, 대북 '직접 외교'의 구사와 6자회담 지속, 북한 인권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주요 의제, 한·미 동맹 강화 필요 등이다.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도 전통적 한·미 동맹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변화된 양국의 능력과 위상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행동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한·미는 여전히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을 안고 있다. 한반도정책의 핵심은 역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차원의 북핵 문제 해결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의 부시 행정부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양자 대화를 추진하고,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거나 대화의 수준을 격상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한·미 공조를 중시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 양자 간 현안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해결 방안에 관심을 가질 경우에도 그 추진을 위해서는 자원동원의 측면에서도 한국, 일본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모델 국가로서 미국 외교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시장경제,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중국과의 관계 차원에서도 한반도는 중요하며, 따라서 한·미 동맹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 오바마의 행동계획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21세기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동맹비전의 작성을 위한 협력은 지속될 것이고, 한·미간에 기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한·미연합방위구조의 전환 등도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실용주의적 접근에 따른 조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안보적 차원에서의 한·미 관계가 변화 속에서도 지속성의 측면이 강하다면, 경제·통상 차원의 한·미 관계에서는 다소의 조정과정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는 그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와 산업의 보호를 이유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보호주의 무역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미 FTA 협상 비준은 진통을 겪을 것이며, 특히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통상 압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특히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과제다.

부시 대통령 부자는 모두 중동에서 전쟁을 치르고 인기를 얻었지만 미국의 경제 악화로 정권이 교체되는 역사 되풀이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은 전 정권의 유산에 의한 영향보다는 미국 정치의 장기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부터 미국과의 관계 변화가 시작되면서 탈냉전시대에 들어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외교의 중심도 중국이다. 일본과의 동맹 강화가 여전히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의 주춧돌이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engagement)정책 강화는, 한·미관계의 변화에 매우 중대한 변수가 될 것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관계를 동아시아의 전략적 구도 변화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에 토대한 동맹비전의 발전 구상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